

# 광주 교사들 “9월 모의평가, 국·영·수 모두 쉽게 출제”

## 광주진학협 소속 교사들 분석

국어 “EBS 체감 연계율 높아” 수학 “공통과목 난이도 하락” 영어 “지문서 정답 추론 가능”

2025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점검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모평)가 4일 실시된 가운데 지역 교사들은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과목 모두 전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신회돈 광덕고 교사는 국어 영역에 대해 “EBS 연계 교재의 체감 연계율이 높다”며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은 조금 더 쉽게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서’ 부문에서 사회, 기술, 예술의 3개의 지문이 연계됐으며, 문학에서 고전시가(호아곡), 현대시(북방에서-전현웅 예제), 현대소설은 EBS 연계 교재의 수록 부분이 그대로 출제됐다. 신 교사는 “시간 압박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사는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도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기술 지문이 주요 개념과 그 관계성을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다수의 수험생이 어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광주 살레시오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교사의 설명이다.

수학 영역도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박영광 송덕고 교사는 “문제풀이의 기술을 요구하는 내용은 대부분 배제됐으며, 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끔 출제됐다”고 했

다. 박 교사는 “특히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두드러지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항도 많이 배제됐다”면서도 “조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재해석해 식으로 도출해 내는 것보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한 문항이 다수 출제된 점은 까다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수학 선택과목의 난이도 역시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사는 “난이도에 따른 문항 배치는 기존과 비슷한 형태로 배치돼, 과목별 마지막 문항인 30번이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며 “EBS 연계율은 대체로 50% 수준을 잘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최고난도 문항으로는 주관식 21번과 22번을 꼽았다. 박 교사는 “최고난도 문항

이라도 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상황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현철 광주석산고 교사는 영어 영역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문항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항이 줄고, 대부분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추론할 수 있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교사는 6월 모의평가는 EBS 교재의 연계 문항이 대부분 듣기, 말하기 위주로 출제됐던 것과 달리 이번 모평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EBS 연계 교재의 연계율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

문 교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요구하는 어휘와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히 학습을 진행해 온 학생이라면 전반적으로 문항 접근도는 높았을 것”이라며 “다만 빈칸추론 문항과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항에서는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호흡이 긴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고 집중력 있게 독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9월 모의평가 응시 현황은 광주 1만5902명(고3재학생 1만3536명·졸업생 등 2366명)과 전남 1만2074명(고3 재학생 1만1653명·졸업생 등 421명)으로 집계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 쌀값 폭락에 광주·전남 농민 “정부, 대책 마련하라”

## 광주시농민회, 시청 앞 기자회견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쌀값 폭락 대책 수립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수확기를 앞두고 반복되는 쌀값폭락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올해 8월 쌀값은 17만7740원까지 폭락했다. 농민들은 줄곧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유지되던 200원선도 무너졌다”며 “농민들은 쌀값이 안정될 물량인 15만톤 이상 재고미 일시 시장격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여러 차례 나눠 격리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민의 요구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다”며 “쌀값은 떨어지는데 정부가 공공비축미 물량을 45만

톤으로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양곡과 가루쌀 매입물량을 빼면 36만톤으로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식량안보를 외면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영암 농민들도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수계농업경영인영암군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영암군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영암군지부 등은 이날 “지난

해에 비해 쌀값이 무려 19%나 하락한 상황이다. 쌀값이 이 가격이면 전남지역 생산하는 벼값으로 환산하면 5만원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비축량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생산량 증가 시 의무시장격리와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 약 5만톤을 소진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코로나19 이전 수

준인 60kg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정부가 남은 쌀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법 개정을 다시 추진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김은지 기자

#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 2심도 징역형... 법정구속

## 법원, 특혜적 계약 인정

친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 전 시장의 동생 이모(68)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 직후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 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형에게 알선해 주겠다고 1만7112톤(133억원 상당)의 철근납품 기회를 받아 4억2300만원 상당

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동생 이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건설사와 철강유통사 사이의 기본적인 영업 활동이었고 납품 계약 과정 전반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1심에서는 이씨가 시장인 형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 납품 계약을 따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가 2018년 11월13일 형과 김 회장의 연락을 주선한 점, 이에 따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관련 감사 착수 전 예비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 직무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따로 이익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선 이용섭 전 시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 호반건설이 자신의 당선을 예측해 자신의 동생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품 결정 시기와 호반건설의 자재 납품 방식,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일련의 진행 경과에 비춰 호반건설과 이씨의 업체가 맺은 가공철근 납품 수의계약은 이례적이고 특혜적으로 보인다”며 “앞선 재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무죄를 인정받아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이씨의 알선수재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살펴봐도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 브로커에 수사 기밀 유출한 전 검찰 수사관 2심서도 실형

##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선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추징금 1343만7500원)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56)씨의 항소심에서 심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심씨는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0여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성씨를 통해 탁씨가 고소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동향 공유와 법률 상담, 진술서 작성·편집 등 과정을 부당하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탁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동료 수사관 백모(49)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도 브로커 성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알려주는 등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범행 일부를 시인한 점, 30여년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브로커 성씨의 주요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 없다. 특히 심씨가 다른 동료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품·향응을 성씨로부터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